

남·북한 경제 분야의 쟁점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단점 보완해야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통일시대를 앞두고 우선 남북한 경제원리의 가장 큰 차이인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대외지향적 수출주도 전략과 북한의 내부 동원적 수입대체 전략의 평가도 고려해야 한다. 통일시대가 되면서 남북한은 세계시장에서 더욱 협조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남북한은 한국전쟁의 폐허와 자원제약 상황이라는 공통기반 위에서 산업화를 추진했다. 남한은 후발자본주의적 전략을, 북한은 후발사회주의적 전략을 추격발전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60년대 초반 서구 좌파 경제학자들은 북한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공업국으로 평가한 적이 있으며, 남한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아시아의 다섯마리 용의 하나로 세계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21세기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아국이 되었고, 남한은 외환 위기의 긴 터널을 고통스럽게 통과하고 있다. 남북한의 급속한 추격발전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계획과 '시장' 논리의 차이

따라서 통일시대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반성과 개혁, 그리고 바람직한 수렴은 시대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적인 관심은 남북한 경제원리의 가장 큰 차이인 계획과 시장의 관계이다. 물론 후발 발전국가로서 남북한은 모두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계획과 시장의 논리 역시 국가주도형 시장과 국가주도형 계획의 의미를 가진다.

국가주도형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다. 남한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재정·금융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에서 국가 개입에 대한 공과는 논란이 분분하다. 국가 개입은 급속한 성장의 신호를 낳은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시

장왜곡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병폐로 지적되는 정실 자본주의, 혹은 정경유착이 바로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남한의 경제는 국가주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의 존폐가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정경유착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에 비해 북한은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해왔다. 이 체제에서 유일한 경제주체는 바로 계획 당국(당-내각-국가계획위원회), 즉 국가 그 자체다. 계획경제의 특징은 '연성예산제약(Soft-Budget-Constraint) 현상'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기업의 지출이 수입보다 초과할 경우라도, 그 기업은 파산하지 않고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 계속해서 생존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생존과 확장이 자체와 노동력, 재정적 보조금의 확보에 달려 있다.

남한식의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운명이 기술혁신에 의한 원가와 비용의 절감,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다면, 계획경제에서 기업의 운명(지배인의 지위상승 등)은 계획의 초과달성을 위해 노동력과 자본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계획경제에서 계획당국은 정보부족과 하부단위의 정보 왜곡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없고, 지배인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며, 노동자는 보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동부담을 줄이고자 행위한다. 계획경제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내부적 부정성을 보면서, 과연 '계획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북한경제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계획이 무력화되고 시장이 부상하는 '왜곡된 이중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암시장이 계획기능을 대체하는 현상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를 경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보다 공식화된 계획과 시장의 결합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거시적 계획과 미시적 시장의 바람직한 결합형태를 찾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논의되던 '계획위주의 시장 사회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대안이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국가의 민주적인 거시적 조정 기능이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의 대외지향적

수출주도 전략과 북한의 내부 동원적 수입대체 전략의 평가다. 이 문제와 관련, 우리 사회에서는 종속과 자립의 도덕적이고 감성적인 이분법적 평가가 있다. 물론 IMF 사태 이전에는 남한의 종속적 발전과 북한의 자립적 저발전이라는 역설적 대비가 관심을 끌기도 했다. IMF 사태 이후에는 다시금 '종속적 발전'의 허구가 지적되고 있다.

'수출주도'와 '수입대체' 전략

하지만 탈냉전 이후 '단일 세계시장체제'인 현재의 지구촌시대에 남북한과 같이 소규모 국가는 자립경제가 불가능하다. 물론 북한이 50년대부터 자력갱생을 주장해왔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실체적으로 북한은 원유, 식량에서부터 각종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에 의존해 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 또한 북한은 70년대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외채의 모라토리엄으로 귀결된 바 있다.

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무역은행(중앙통계국)이 97년 UN 분담금위원회에 제출한 95년 GNP 52억 1천5백만달러를 적용하면 북한의 수출입 의존도는 40%가 넘는다. 식량의 경우, 북한은 97년 WFP(세계식량계획)의 원조 31만톤, 중국 86만톤을 비롯한 163만톤을 외부에서 수입했다. 주식의 20%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대외 의존성은 외채 미상환국에 따른 외환 거래의 제약과 미국의 대북경제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급속히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역시 대외의존형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통일시대가 되면서 남북한이 세계시장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의 발전격차가 있기 때문에 발전지향적 분업을 통한 경제협력을 진행시켜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이질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중국 대륙과 미일 양국의 중계역할을 할 수 있다. 자립과 종속의 낡은 이분법이 아닌 개방시대의 주체적 조정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냉전시대의 전형적인 대립적 발전전략을 보여왔던 남북한이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협력적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